

“사드 전자파 정부 객관적 근거 제시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는 “레이더가 고지대(해발 393m)에 위치하고 최소 5도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상향 직진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레이더 운용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 역시 현행 전파법과 세계 보건 기구(WHO)의 안전기준(2GHz~300GHz 주파수 대역에서 전력밀도 10w/m² 이하)을 충족한다”고 강조한다.

일단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을 “믿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지대에서 운용되는 만큼 그 밑에 있는 주민이나 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만큼 민간인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든가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 방식이나 근거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지적도 함께 제기한다. 정부가 객관적이고

“지역 주민·환경에 미칠 영향 적지만 우려할 수밖에 없어” 장시간 노출에도 안전할까... 운용 실수나 돌발 변수 가능성도

과학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국제생체전자과학회자인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 교수는 1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레이더가 해발 393m 지대에서 최소 5도 이상 각도로 하늘을 향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최소 5도 각도로 하늘을 향해 빔을 쏘더라도 3.6km 떨어진 곳에서는 63빌딩(249m)보다 높은 315m 상공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다. 경북 성주의 경우에는 해발 393m 높이에 레이더가 설치되므로 708m(393+315) 상공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물론 전자파가 직진하다가

반사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사될 경우에는 그 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특히 레이더는 직진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미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방송 시설이나 휴대폰의 전자파가 오히려 범위로 놓고 보면 더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국방부 설명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의 자료나 평가보다는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곧 사드 기지를 공개한다면 실제 운용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위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사드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사드가 처음으로 배치되는 만큼 운용 과정에서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학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전자파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 즉 출력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사드 레이더가 설치되면 분명히 강한 에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그렇다고 햇빛을 쬐지 말고 말하자는 양지만 해변에서 오랫동안 햇빛을 받으면 화상을 입기도 하고,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리지도 않나. 사드 문제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새로운 산업·아이템 발굴 고민을” 도의회산경위,경제산업국 업무보고청취

전북도의회 산경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4일 제335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위치가 전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신시가지 지역에 위치해 사무실 임대료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사무실 위치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다른 예산을 시군의 찾아가는 서비스 식의 이동 상담 개설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무실 예산 절감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전북 제조업 기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포켓몬GO라는 게임을 보면 단순한 게임 아이템이 단 몇 주 만에 속초 대중교통이 전부 매진될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제조업 기반 산업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추세를 참고하여 새로운 산업과 아이템 발굴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용호 의원(군산2)은 “현재 시군, 도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MOU 체결 이후에 사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들이 지역투자를 위해서는 투자를 위한 지역정보, 행정적 절차, 부지확보, 설계 등의 사전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 멘토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고졸 취업활성화 및 확대 정책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출연기관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임시직으로 숫자맞추기식 채용에 급급하다. 도와 출연기관부터 고졸자 취업에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백경태(무주) 의원은 “도내 산업단지가 상반기 보고 자료와 비교해 사업체는 늘었는데 단지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합계가 맞지 않는 등 수치상 오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상반기 보고 후 단 몇 달 만에 수치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실무부서에서 사업현황 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각종 사업 현황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의원(비례)은 “전라북도내 택시요금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수도 요금 역시 전국 평균 대비 울산, 부산, 경남 다음으로 높다. 인구나 지역 생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전북도가 유독 높은 것은 도에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주로 관련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정진세 의원(비례)은 “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있지만 이런 통계조사,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같은 장기적이고 경제 분야에 집중된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다. 하루 빨리 경제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유학생 유치지원 연구회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벤치마킹

전북도의회 유학생 유치지원 연구회(대표 허남주)는 14~1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 등을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 벤치마킹에 나섰다.

현재 전북에는 2,894명의 유학생이 있지만 이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299명이 감소했다. 특히 유학생 수는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따라 학생 수의 증감 폭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부산에서 지원 중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과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도비지원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효율성을 따져보고 필요하면 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허남주 대표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지역 대학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뒤 전북도가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가성비(가액 대비성능)를 의회차원에서 검토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학생 유치지원 연구회는 행정자치위원회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이며, 1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신광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에 실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삼성의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MOU 철회 논란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지역사회의 세게 일류기업을 표방하는 삼성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북도당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전폭 이전 무산에 따른 정치적인 결과물과 다른 MOU와 비교해 도민이 갖는 정서적 의미는 남다르다”면서 “삼성 MOU 당시 새만금 투자로 5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놓고, 이제 와서 경영상의 이유로 발을 뺀다면 이는 200만 전북도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리를 다하고자 한다면 철회이유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진정성 있게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 상실감을 치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안마련에 지역사회에 함께 고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한반도에 사드가 웬말이나?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반대전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 문재인, 사드 대응 놓고 정면 충돌

문재인 “재검토·공론화 필요”에 김종인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어” 비꼬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대응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민주 전현직 대표인 두 사람이 충돌한 것은 총선 이후 벌써 3번째다.

문 전 대표가 13일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곧바로 김 대표가 이를 무시해버리는 발언을 하면서 양측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가 바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표 발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나”며 “사드를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그게 재검토가 되겠어”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재검토 주장과 국회 동의 필요 주장 등도 모두 일축했다.

둘 간의 이번 충돌은 그간 쌓인 앙금도

작용한 듯 하다. 두 사람은 총선 직후 ‘당 대표 합의추대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들은 4월2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가 끝난 것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하며 대표 추대론 등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인 23일 김 대표를 차기 당 대표로 합의 추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도 불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다음날 “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내가 출마하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너 이상 개인적으로는 문 전 대표를 안 만날 것이다. 믿을 수가 없다”고까지 했다.

김 대표는 “남편러지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구해줬더니 문 전 대표와 친문(親文)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엉뚱한 생각들을 한다”며 “내가 만찬에서도 친노, 즉 당신 편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문 전 대표가) 자기 말을 안 듣는 친노도 많다더라.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하나”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후 대선후보 경선 여부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김 대표는 5월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정권 교체에 희망을 전북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전북 민심이 신뢰할 수 있는 대권주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북 민심은 한두사람 노력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다수의 대권 주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놓고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문 전 대표 본인과 측근들은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잡뭉해있던 두사람 간 갈등이 이번 사드 문제로 다시 불거지자 당내에선 자신의 대표 임기 막판에 잃을 것이 없는 김 대표와 전당대회 후 중앙정치무대 복귀를 예고한 문 전 대표가 또다시 충돌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

정운천 “낙후 전북에 예산 배려를”

국회 정운천(전주시, 새누리당)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전북 사업에 대한 예산배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들은 전북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힘의 논리에서 밀려 번번이 예산배정에서 탈락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0여년 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왔던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예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국가별 경험투구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전북도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설명하면서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권 산림치유원 등 전북 핵심사업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 1차 심사에서 정책 삭감되거나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 핵심사업들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권 산림치유원조사사업 100억, 태권도명예의전당 70억,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53억 등 6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삭감된 상황이다. /신광영 기자

양성빈 “국가예산확보 철저한 대비를”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정수)은 14일 진행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과 더불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2018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2년 전부터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어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내용에는 관광분야가 너무 미약하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팀 분석을 통해 제대로된 재단이 될수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체육회 통합의 추진목적은 예산낭비를 절감하는 것인데도 2차 1실 체계로 간 것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끌고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의 의미가 너무 미약하며, 경영기획실장과 2차장을 3급으로 하고 도 파견근무를 2명 두는 것은 기형적 형태이므로 내부 통합 추진 로드맵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